



環境과 매스미디어

姜 信 龜
〈京鄉新聞社 編輯部 副局長〉

환경오염문제는 비단 한 나라의 문제 뿐 아니라 지구의 운명을 좌우하는 존재로 등장했다. 특히, 지난 '88년은 지구환경문제 인식의 전환기를 가져다 준 해로 기억된다. 그해에 오존층이 파괴되어 재앙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됐고, 또 논란의 대상이었던 지구온실효과 등 오염에 의한 지구기후 변동현상이 거의 명백하게 입증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이같은 환경문제는 앞으로 국제정치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그 한 예로 지난 해 캐나다에서 열렸던 세계에너지회의(The World Energy Congress)는 종래의 환경과의 정반대의 입장과 달리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목을 끌었다.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 가운데 앞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전지구적으로 규제하자는 의견들이 고개를 들고 있어 환경문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에너지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선진공업국들이 이를 기화로 횡포를 부릴 가능성도 있어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국제변화에 미리 대응책을 세워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를 돌아보면 지난 해 상수도 오염과 동으로 볼 수 있듯이 환경문제는 단순한 사회문제에서 벗어나 안보차원의 문제로 악화되고 있

다. 특히, 환경문제는 아직은 미약하나 녹색당 출현 등 정치적인 이슈로 등장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국민보건을 위협할 지경에 이른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제감시, 시민운동차원의 감시체제 그리고 매스미디어에 의한 감시 및 계도체제가 한층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부의 규제감시는 최근 환경기구가 부처급으로 격상됐으나 아직도 제도, 법 시행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보전법의 경우 미시적인 배출규제에 그치고 있고, 환경생태계의 감시는 거의 손을 못쓰고 있는 형편이다.

외국에서는 지역별 시간별 오염치를 측정하고 그것을 시뮬레이션 기법을 동원 환경영향 평가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한된 측정망에 평균치를 사용하고 있어 오염이 어떻게 환경이나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감시능력이 크게 부족하여 PCB, Dioxin, THM 등 신형 공해물질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쓰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시민운동의 경우 민간차원의 연구소가 설립되고 소비자보호단체들이 환경문제에 눈을 돌리고 있으나 전문가 부족으로 아마추어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민간부문에서 환경오염감시운동은 독자적인 감시체제보다는 다분히 국민운동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매스미디어 또한 전문부서나 전문 보도인력 부족으로 독립적인 감시와는 거리가 먼 보도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가 매스미디어에 등장한 것은 '60년대 후반부터이다. 그러나 개발우위의 정책 때문에 환경언론이 제한됐고, 그런 경향은 '80년대 5공화국까지 이어져 환경에 대한 보도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억제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전문적인 견식이 필요한 환경보도 전문인력이 거의 양성되지 않아 독자적인 감시능력을 상실한채 정부당국이나 학계의 발표를 거의 앵무새식으로 전달만 하고 있다.

일간신문사의 환경보도는 최근 과학부 등 전문기자에 의해 다루어지기 시작했으나 대부분은 사회부 일반기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그 결과 환경보도가 과소 또는 과잉평가되어 이따금 불의를 빚고 있는 형편이다.

외국의 경우 환경전문 보도인력을 양성하고 생활환경부를 따로 두어 환경오염에 대해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매스미디어는 물론 정부도 환경전문 보도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보도에 제약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 환경정보의 정부독점 문제이다. 환경당국은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실제 환경수준을 모른채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 설치한 오염도 표시판도 하루 평균치에 그쳐 실제 환경이나 인체에 큰 영향을 주는 순간 최고치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공개되는 정보마저도 PPM과 같이 전문가나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어서 실제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미국의 경우 LA타임지 등에서는 오염상태를 PSI 등의 지수를 이용, 일반인들이 한눈에 알

수 있게 보도하고 있다. 이 신문은 지역별로 오염예보까지 해서 오염이 심할 경우 어린이, 노약자들의 외출을 삼가할 것 등을 실어 오염피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오염상체를 수시로 체크, 오염치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공장 가동정지, 자동차 통제 등 오염원 조정을 마스크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며 환경피해를 줄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측정망을 넓히고 측정정보도 단편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항시적인 운영이 시급하다.

환경보도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정보의 공개이다. 환경정보가 현재와 같이 정부의 독점물이 되고 있는 한 환경오염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환한 일이다. 우리도 정보공개법 등을 마련, 환경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어 지역사회 스스로가 환경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 정보공개 응급조치법(The Emergency Plan of The Community Right to Know)이 지난 '88년 발표된 이래 환경문제들이 활발하게 개선되고 있다. 이 법은 배출자가 주민에게 환경오염 측정치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 법이 발효된 이래 미국에서는 1천9백건의 위반사태가 적발됐다. 외국의 경험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이익을 위해 환경오염을 감추려 하고 있고 반면 중앙정부는 감시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실시되면 이와 비슷한 양상을 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와 같이 환경치가 전국 사업장의 배출상황을 감시하는 제도에서는 효과적인 감시를 하기 어렵다. 열 명의 포졸이 한 명의 도둑을 잡기 어렵다는 우리 속담대로 정부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해 보았자 속이는데는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감시받을 만들 것이 아니라 배출원이 스스로 정보를 제공토록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